

## 중국의 선부론(先富論)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비교\*

위뤄잉(于若瑩, 동국대학교)

이 글은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제2세대 지도자가 집권 초기 경제위기에 대응했을 때 나타나는 정책적 배경과 정책수단의 공통점과 상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이 위기타파 및 경제회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사회주의 진영의 심각한 변동 속에서 북·중 양국은 사회주의체제의 결함을 인식하게 되고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도입해서 사회주의체제 운영기능을 조정하려고 했다. 따라서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위기대응책이자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전략은 제기된 배경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인 정책노선이라는 점, 새로운 지도자가 집권 초기 경제노선의 변화를 위해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 개혁조치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도 비슷하다.

하지만 북·중 양국은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다르게 내렸다. 중국은 좌경착오에 주목하였던 반면, 북한은 외부환경 변화를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서로 다른 진단에 따라, 처방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다. 경제발전 전에 대한 인식, 제도적 지원책, 정책의 일관성, 외부환경 등에서는 적지 않은 양국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선부론에 비해 혁명적 경제전략은

\* 본 논문은 2016년 12월 22일 한국의 평화문제연구소와 중국의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26차 한·중 학술회의(“한·중 신진학자들의 대화, 한반도를 보는 새로운 눈”)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의 내재적 모순성, 제도적인 지원책과 정책집행의 일관성 결여, 외부환경 여건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제어: 선부론, 혁명적 경제전략, 경제 위기 대응, 사회주의국가 발전경로, 비교

## 1. 서론

1948년 9월 9일 공식적으로 수립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듬해 10월 1일 수립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위상은 70년 가까이 지난 2017년 현재 너무 대조적이다. 공산주의 국가로서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에서 출발하였지만, 중국은 2010년대 초반 경제 총량 기준으로 세계 제2위 국가로 발돋움하였지만,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시작된 경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낙후된 경제 상태에 놓여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났을까? 이에 대해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가졌기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는 이러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러한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려면 지도자의 능력을 논하는 것보다 두 나라의 지도자 집단이 당면한 경제 현실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발전 양상이 확연히 달라지는 시점은 제2대 지도자 혹은 영도집단으로의 권력 이행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장기 침체에 직면하여, 덩샤오핑과

김정일은 사회주의 국가의 제2대 영도자로서 서로 완전히 다른 발전 전략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중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1978년부터 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계급투쟁을 요점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에서의 계속 혁명’을 부정하고 ‘혁명노선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평균주의에서 벗어나 시장경제하의 경쟁과 차등을 인정한 선부론(先富論)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이 당시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적 기둥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정책 선택의 결과로, 중국은 자신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1인당 GNP은 1978년 190달러부터 2014년 7,380달러로 증가했고, 경제 총량 순위도 1978년 세계 13위에서 2009년 2위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성장의 추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sup>1)</sup>

한편, 1980년대 들어 둔화하기 시작한 북한 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함께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1980년 공식적으로 등장한 김정일은 1990년대 들어 사실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1993년 김정일은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이른바 “혁명적경제전략”<sup>2)</sup>을 내세우고, 이 기간에 나라의 경제

---

1)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改革開放鑄輝煌 經濟發展譜新篇—1978年以來我國經濟社會發展的巨大變化,” [http://www.stats.gov.cn/tjgz/tjdt/201311/t20131106\\_456188.html](http://www.stats.gov.cn/tjgz/tjdt/201311/t20131106_456188.html) (검색일: 2017년 6월 13일); “新常態新戰略新發展—“十二五”時期我國經濟社會發展成就斐然,” [http://www.stats.gov.cn/tjsj/zxfb/201510/t20151013\\_1255154.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1510/t20151013_1255154.html)(검색일: 2017년 6월 13일) 참조.

2) 1993년 12월에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농업·경공업·대외무역제일주의’를 기본 모토로 하는 ‘혁명적경제전략’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북한 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북한식 표기를 그대로 가져

구조를 과거 생산재 중심 경제구조에서 소비재생산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1993년 말부터 2~3년으로 예상했던 혁명적 경제전략의 집행 기간은 1998년 초까지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 분야 전문 학술잡지인 『경제연구』 1998년 2호에서 “혁명적경제전략을 추진하는데 국방력을 성과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sup>3)</sup>고 강조하고, 동년 10월 『로동신문』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군정치를 제시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당초 제시했던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수정을 의미하였으며, 혁명적 경제전략의 종결로 볼 수 있다. 북한 지도부는 혁명적 경제전략의 제기가 한편으로는 “현시기 우리나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은 인민복리증진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목적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기간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심각한 자연재해가 겹쳐 1994~1997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아사자가 속출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 마이너스 성장(실질성장률 기준)을 나타냈다. 이 기간 북한의 GDP는 무려 30%나 감소했다.<sup>5)</sup>

중국과 북한은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국면에서 제2세대 지

---

왔으며, 그 이외에는 한국식 맞춤법(예를 들면, ‘혁명적 경제전략’)을 따랐다.

- 3)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경제를 변함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제99호(1998), 3쪽.
- 4) 박순성, “김정일 시대(1994~200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2004), 64쪽.
- 5)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서울: 한울, 2010), 17쪽.

도자로의 권력 승계 문제에 직면했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과 위기 극복 정책의 실효성은 권력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국가 발전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다. 소련·동유럽 등 사회주의 진영의 도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 가능한 통치 수단의 효과적 이용은 양국 지도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만 했던 첫 번째 사항이었다. 중국과 북한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선택함으로써 뚜렷이 다른 국가전략을 보여 주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의 재해석과 경제개혁·개방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형성했고, 북한은 혁명적 경제전략을 펼쳤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선군노선을 내세워 체제 불안정을 완화하려고 했다. 물론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그리고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시행된 정책이었지만,<sup>6)</sup> 그 이후부터 양국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래에서는 중국과 북한 양국의 제2세대 지도자가 제기한 위기 대응책, 즉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각각의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2절과 3절) 비교한(4절) 다음, 혁명적 경제전략의 한계

---

6) 2005년 10월에 개최한 중국 공산당 제16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공보(公報)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공평한 분배를 지향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선부론의 “효율우선, 공평겸용(效率優先, 公平兼用)”이라는 측면보다 공평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필자는 선부론의 실제적인 시행 기간을 2005년까지로 보고, 그 이후에는 공부론(共富論)으로 정책이론이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선부론을 약 25~30년 정도, 북한은 혁명적 경제전략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여 년 정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를 도출하고자 한다(5절).

## 2. 선부론의 형성 배경과 정책적 특징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세 번째로 복권하게 된<sup>7)</sup> 덩샤오핑은 ‘진리 검증’ 논쟁을 통해 중앙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여세를 몰아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11기 3중전회)를 개최하고,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의 정신에 따라 ‘계급투쟁을 핵심’으로 해오던 당 노선을 ‘경제건설 위주’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농업·공업·과학기술·국방 4개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당과 국가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시기의 총체적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장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의 현대화 건설을 이룩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11기 3중전회 개최일은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당시 서방 언론 및 학계에서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세부 추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개혁·개방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성공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 각종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그에 대한 명료한 답변은 제시되지 못했다. 11기 3중전회는 당의 당면과업을 현대화와 경제건설로 규정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었다.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에게도 명확한 청사진이 없었다.

---

7) 덩샤오핑은 일생동안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삼락(落)삼기(起)한 ‘不倒翁(오뎅이처럼 넘어지지 않는 노인이란 뜻)’으로 유명하다. 1977년도에 세 번째로 복권했다.

“대신에 그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摸着石頭過河)’라고 인정하면서 지금은 모두에게 알려진 이 말만을 되풀이”했다.<sup>8)</sup> 선부론(先富論), 즉 ‘일부 사람, 일부 지역으로 하여금 먼저 부유하게 한다(讓一部分人, 一部分地區先富起來)’는 대정책은 바로 이 시기에 제기되었다.<sup>9)</sup>

## 1) 선부론의 형성 배경

### (1) 좌경 착오와 국민경제의 붕괴

1957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도사상에서 나타났던 중대한 착오는 소위 ‘좌경(左傾)’이었다. 좌경노선은 중국 사회의 실제적인 생산력 수준을 이탈하여 소유제의 ‘일대이공(一大二公, 공유제가 순수할수록, 공유제의 범위가 넓을수록 좋다)’을 추구하고 평균주의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민대중의 생산의욕을 상실시켰다. 더욱 극좌적인 사회주의 대중운동이었던 문화대혁명은 절대평균을 강조한 결과, 인민대중은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두려워하기에 이르렀다.<sup>10)</sup> “가난은 사회주의다”라는 인식이 만연할 정도로, 중국 국민은 1957부터 1978년까지 장기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렸다.

8) 에즈라 보겔(Ezra F. Vogel), 『덩샤오핑 평전』, 유소영·심규호 옮김(서울: 민음사, 2014), 35쪽.

9)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13일 중앙공작회의 폐막식에서 발표한 “사상해방, 실사구시, 일치단결하여 앞을 향해 전진하자(解放思想, 實事求是, 團結一致向前看)”라는 연설에서 선부론을 “하나의 근본정책이며, 전국 국민경제를 이끌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덩샤오핑, 『鄧小平文選(上): 1975年~1980年12月』, 이문규 옮김(부천: 인간사랑, 1989), 173쪽.

10) 沈寶祥, “30年來國人思想觀念的三大轉變,” 『人民論壇』, 第24期(2008年), 9쪽.

<표 1> 1978년 주요 제품 1인당 평균생산량

제품명	단위	중국	미국	소련	일본	독일 (연방공화국)	프랑스	인도
면직물	미터	11.5	17.4	26.8	20.2	16.2	19.0	10.9
설탕	근	4.8	47	71	10	100	152	12
식량	근	636	3008	1962	316	878	1770	488
육류	근	17	160	100	29	136	131	2

자료: 중국 상무부(商務部) 『조연자료(調研資料)』, 제56호(1981).

화궈펑(華國峰)이 1978년 업무보고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거의 ‘국민경제의 붕괴상태’에 이르렀으며, 경제발전은 10년 이상 후퇴하였다. 1974년부터 1976년까지 발생한 경제손실만 살펴봐도, 공업 총생산 1천억 위안, 강철 2천 8백만 톤, 재정수입 4백억 위안에 달하였다.<sup>11)</sup> 생산재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소비재 생산도 같은 시기의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보다 크게 뒤쳐져 있었다. 다음 <표 1>에서 주요 국가의 1978년 주요 제품 1인당 평균생산량을 통해, 중국 당시의 소비재 생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978년 중국 경제의 침체는 문화대혁명만으로 초래된 결과가 아니었다. 중국학자 친후이(秦暉)는 “중국 개혁 전 구체제하의 경제발전 성과에 대한 논의(中國改革前舊體制下經濟發展績效芻議)”<sup>12)</sup>라는 논문에서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경제는 명령형 계획경제하에서 초기에는 성장을 했지만, 장기적인 시장 인센티브 결여 및 합리적<sup>13)</sup> 경제계획

11) 華國鋒, “五屆人大一次會議“政府工作報告”, 中國改革信息庫, <http://www.reformdata.org/content/19780226/5265.html>(검색일: 2017.02.13).

12) 秦暉, “中國改革前舊體制下經濟發展績效芻議”, 『雲南大學學報: 社科版』, 第2期(2005年), 54~68쪽.



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소련, 인도 그리고 해방 전 국민정부 시기보다 경제축적 및 효율성에서 많이 뒤떨어졌다고 논증했다.

## (2) 외교노선의 변화와 국제환경의 개선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의 대외정책에는 두 가지 경향이 병존했다. 하나는 마오쩌둥 시기부터 계승해 온 ‘혁명적 외교노선’, 즉 제3세계 국가들의 식민지·반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고 반제국주의·반수정주의(反修正主義)를 주장하는 대외정책이었다. 다른 하나는 ‘실무적 외교노선’, 즉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의 평화공존을 추진하고 소련과의 관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실무적 외교노선은 부분적 역할에 그쳤고, 대외정책을 주도한 노선은 혁명적 외교노선이었다.<sup>14)</sup> 이 때문에 덩샤오핑도 복권 초기에 혁명적 외교노선의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세계를 3분하는 관점<sup>15)</sup>과 전쟁의 가능성을 반복해서

---

13) 진휘이는 소련에서는 공업문명과 시민사회의 영향으로 경제체제 특성에서 과학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의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농민혁명식 동원경제와 관료명령경제의 특징이 더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글, 55쪽.

14) 陳啓懋, “鄧小平主導調整外交政策,爲我國現代化建設贏得重要戰略機遇期,” 『領導者』, 第8期(2014年), [http://www.cssn.cn/zx/zx\\_gjzh/zhnew/201409/20140917\\_1331141.shtml](http://www.cssn.cn/zx/zx_gjzh/zhnew/201409/20140917_1331141.shtml) (검색일: 2017년 6월 13일).

15) 1974년 2월 22일 마오쩌둥은 잠비아(Zambia) 대통령이 예방했을 때 세계를 삼분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제1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가리킨다. 이 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초강대국이다. 제3세계는 아세아주, 아프리카주, 남미주와 기타 지역에 있는 발전도상국들이다. 덩샤오핑, 『鄧小平文選(上): 1975年~1980年12月』, 96쪽 각주 30.

강조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중국 지도층 내부에는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소련과 소련의 우방국들에 있다는 판단이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 기타 비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를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sup>16)</sup> 1978년 중·일 간 ‘평화우호조약’ 체결과 1979년 중·미 국교 수립에 따라 중국의 국제환경은 크게 개선되었고, 이와 함께 중국 지도층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발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인식했지만, 덩샤오핑은 “국제정세는 매우 좋아지고”, “전쟁의 폭발은 지연될 수 있”으니 경제발전을 위한 “시간을 벌어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sup>17)</sup> 1970년대 말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시기였으며, 이는 중국에게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자금을 도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이처럼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국제환경의 개선이 경제성장으로 직접 귀결되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향후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할 외자도입의 선결조건이 되었으며 개혁·개방에 반드시 필요한 안정된 외부환경을 제공했다.

---

16) Robert G. Sutter, “External Factors Affecting the Economy,”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edited, *China’s Economic Dilemmas in the 1990s: the Problems of Reforms, Modernization, and Interdependence*(New York: M. E. Sharpe, 1992), p.51.

17) 덩샤오핑(鄧小平), “중앙군사위원회에서의 연설(在中央軍事委員會議上的講話)”(1977년 12월), 『등소평 문선(上)』, 96쪽.

## 2) 선부론의 이론화 과정<sup>18)</sup>

선부론은 덩샤오핑이 두 번째 복권하고 난 뒤인 국민경제 정돈(整頓) 시기(1975년), 그리고 세 번째로 복권한 직후 시기,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 제기되었다. 덩샤오핑은 제1단계에서는 문화대혁명 때 사인방의 극좌 사상으로 인해 폐지된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분배원칙을 넘어서서 각 개인, 단체, 지역으로 확산한 넓은 의미의 ‘대정책’으로 승화하여 개혁·개방 시기 불균형발전노선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우선 덩샤오핑은 일찍이 국민경제 정돈 시기부터 사인방이 주장한 평균주의를 부정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1975년 8월 상하이(上海)시 당서기 마텐수이(馬天水)와 담화했을 때 이미 드러났고, 1975년 11월 발표가 예정되었던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관한 약간의 문제(關於加快工業發展的若干問題)”, 즉 공업 20조라는 문건에도 이 의도를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문건은 덩샤오핑의 실각으로 인해 발표되지 못했다.

1977년 8월 세 번째 복권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덩샤오핑은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의 회복에 착수했다. 상금 제도, 원고료 지급 등 물질적 인센티브도 같이 회복하고, 최대한으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덩샤오핑은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의 실행이

---

18) 아래 내용은 熊華源, 張愛茹, “論鄧小平‘先富’與‘共富’思想的歷史演變,” 人民網-中國共產黨新聞<http://cpc.people.com.cn/GB/74144/78414/5402917.html>(검색일: 2017년 6월 13일); 張愛茹, “鄧小平‘先富’, ‘共富’思想的歷史考察,” 『黨的文獻』, 第6期(2005年); 그리고 牛欣芳, 『談先富』(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85) 주로 참고하여 정리했다.

경제의 빠른 성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이 분배 원칙을 계속 견지하다 보면 “기술 수준, 관리 수준과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주의(발전)에 이 원칙의 장점인 생산력 추진이 최대한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sup>19)</sup>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회복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났다. 지역 간, 도시·농촌 간, 부문 간의 경제조건과 경제발전의 시공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같은 성장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평균주의 방식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과 해결책이 필요했다. 이런 배경 아래 1978년 9월 20일 덩샤오핑은 텐진(天津)을 현지지도하면서 마오쩌둥의 말을 인용하여 “일부 사람이 부유하게 하라”는 사상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1978년 12월 13일 중앙공작회의 폐막식에서 발표한 연설에는 ‘선부론’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정책에서 일부의 지구와 기업, 그리고 일부의 노동자와 농민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여 성적을 크게 올렸기 때문에 수입을 더 많이 받아서 생활을 더 좋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이 우선 좋아지기 시작하면, 곧 필연적으로 매우 큰 시범역량을 창출시키며, 모든 이웃에 영향을 주고, 기타 지구와 기타 단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따라 배우도록 자극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곧 전국각족인민들도 비교적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서북·서남과 기타 몇몇 지구에서의 생산과 군중생활은 여전히 매우 곤궁합니다. 당연히 국가가 이 지역에 대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

1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鄧小平思想年譜: 1975~1997』(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79쪽.

주고 특히 물질적으로 유력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근본 정책이며, 전국국민경제를 이끌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므로 동지들이 더욱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할 것을 권의하는 바입니다.<sup>20)</sup>

위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먼저 일부 개인과 기업, 지구가 노력을 통해 부유해지는 것을 정책적으로 허용해주고, 경제효과에 따른 장려, 즉 인센티브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선부의 시범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공동 부유를 달성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간의 불균형발전을 인정하고 국가의 물질적 도움으로 후진지역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선부론은 근본정책으로서 많은 후속 정책이나 조치의 이론적인 근거이자 신국면 전개의 열쇠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고 평범한 이 몇 마디는 나중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경로 형성에서 시발점이 되었다.<sup>21)</sup> 선부론에서 나타난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사고는 아래 정책적 특징 부분에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 3) 선부론의 정책적 특징

문화대혁명 이후 경제과탄에 이른 중국 당국은 권력의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 질서의 회복과 민생의 안정은 지도층에게 시급한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지도층은 평균주의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개혁조치의

---

20) 덩샤오핑, 『鄧小平文選(上): 1975年~1980年12月』, 172~173쪽.

21) 武力, “均衡與非均衡: 鄧小平關與經濟發展的辨證思想研究,” 『黨的文獻』, 第6期(2012年), 52쪽.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정책차원에서는 사회통제시스템의 완화를 통해 개인·단체·지방정부의 경제적 자율권이 회복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부론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경제 위기 및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국가전략으로서 문화대혁명 시기의 평균주의를 부정하고, ‘가난이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노력을 통해 부유해지는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가난한 사회주의’의 부정에 따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지금의 중국은 사회주의의 어떤 역사적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선부론과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제기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1981년 6월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關與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와 1982년 12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고 자인하였다. 선부론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견지해야 할 노선으로서, 1986년 9월 28일 당 12기 6중전회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지도 방침에 관한 결의(關與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指導方針的決議)』를 통해 규정되었다.<sup>22)</sup> 선부론이 제기됨에 따라 등장한 사회주의의 개념 문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 담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으며,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규명은 이후 개혁과정에서 이데올로기 차원의 중요 변화이자 후속 개혁·개방 정책과 노선에

---

22) “반드시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경쟁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역사시기동안 공유제를 주체로 한다는 전제 아래 여러 가지 종류의 경제요소를 발전시켜, 공동으로 부유케 하는 목표를 위해 일부 사람들이 우선 부유하게 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陳維力 옮김, “사회주의 精神文明 건설의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 『중소연구』, 제10권 4호(1986), 283쪽.

이론적 근거와 지침으로 작용했다.

둘째, 선부론의 제기는 사회주의 이념과 당의 역사 그리고 전임지도자의 과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루어진다.<sup>23)</sup> 분배 원칙과 관련해서는 평균주의가 비판을 받고 ‘효율 우선’ 원칙이 제시되었다.<sup>24)</sup> 법적으로는 1975년 4인방에 의해 제정된 헌법과 화궈평에 의해 반포된 1978년 헌법이 폐지되고, 1982년 신헌법이 통과되었다. 신헌법에서는 1975년 헌법과 1978년 헌법 1조에서 강조한 ‘무산계급 집권’이라는 내용을 ‘인민민주 집권’으로 수정함으로써 국가 성격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문화대혁명 시기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삼자”라는 사상을 부정하고 국가의 근본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집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중국 개혁·개방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5)</sup> 중국 지도부는 조직 차원에서 1983년부터 전국적으로 정당(整黨)운동을 일으키고,<sup>26)</sup>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개혁·개방에 대한 사상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부유’, ‘효율’, ‘인민민주’, ‘현대화 건설’ 등을 강조한 개혁·개방 정책과 노선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셋째, 중국의 개혁은 우선 인구의 80퍼센트를 차지한 농촌 지역부

---

23) 이는 소련과 중국의 개혁 특징으로 북한과 대조적이다. 고유환, “사회주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 40쪽.

24) 1993년 중국공산당 14기 3중 전체회의에서 『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건설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결정』에서는 “효율우선”원칙을 “효율우선, 공평경용”원칙으로 확장보충해서 중국 개혁개방의 분배원칙으로 공식화하였다.

25) 馬嶺, “對我國現行憲法中“階級鬭爭”問題的反思---兼與1954年憲法作比較,” 張慶福·韓大元 主編, 『1954年憲法研究』(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5).

26) 구체적 내용은 Barrett L. McCormick, *Political Reform in Post-Mao China*(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p.157~190 참조.

터 시작했다. 선부론의 제기에 따라 각 지역의 농업생산과 농민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험들을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제도화를 했다. 1978년 말 중국은 안후이(安徽)성 평양(鳳陽)현 샤오강(小崗)촌에서 처음으로 농가청부생산(包產到戶)<sup>27)</sup>을 실시하고, 개별 농민에게 상품생산 및 경영 주권을 부여했다. 이런 정책은 농민들의 농업 생산 의욕을 부추겼으며, 샤오강촌은 협동화 이래 1979년 처음으로 국가계획 생산 목표인 15,000톤 곡물 생산량을 달성했다.<sup>28)</sup> 농가청부생산 경험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난 이후에 중국은 전국 각 지역에서 농가청부생산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였고, 1982년 이를 농가청부생산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로 제도화하였다. 농촌지역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서 덩샤오핑은 “농가청부생산책임제는 농민들의 창조물이다. 농업개혁 중에 많은 부분은 기층조직에서 창출되었다”고 평가했다.<sup>29)</sup> 이러한 선부론의 실천은 제도에 의해 구속되었던 생산력을 점진적 방법으로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선부론은 경쟁원칙을 도입해서 인센티브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sup>30)</sup> 사회주의 명령식 경제체제하에서 실시되었던 집단 전체에 대한 성과급 지급방식과는 달리 선부론은 개인에

27) 농가청부생산의 기본적인 실시방법은 생산량을 규정한 토지를 농가가 청부받아 경작한 후, 규정생산량을 생산대에 납부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청부를 맡은 농가가 전부 갖거나 농가와 생산대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린이푸(林毅夫) 외,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한동훈·이준엽 옮김(서울: 백산서당, 2001), 176쪽.

28) Wu, “The Xiaogang Village Story.” Alexander V. Pantsov, Steven I. Levine, *Deng Xiaoping: A Revolutionary Lif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363 각주 17 재인용.

29)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第3卷(北京: 人民出版社, 1993), 382쪽.

30) 오이(Jean C. Oi)는 인센티브구조의 형성이 중국 농촌경제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Jean C. Oi, *Rural China Takes Off: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Economic*(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참조.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창발성을 유도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중국 농촌에서는 농가 및 농가청부경영(包干到戶)<sup>31)</sup> 등 과거에 개인 사경제로 간주되었던 생산방식들이 ‘사회주의 생산책임제’<sup>32)</sup>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 소유제도 및 경영방식의 변화를 통해 실리를 얻는 농민들이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시에서도 1980년 초부터 개체호(個體戶)라는 개인상공업 창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개인 상거래에 대한 허용은 도시 주민 일상생활을 풍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경제성장에서도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선부론은 불균형발전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1차 5개년계획 시기(1953~1957년)부터 지역경제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내륙지역에 국가투자를 집중하였다. 균형발전전략은 초기에는 국가생산력 구조의 재균형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지만, 1964년 삼선(三線)건설 시기에 이르러서는 내륙지역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경제발전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 수익성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새 지도부는 균형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선부론을 통해 “일부 지역으로 하여금 먼저 부유하게 하라”는 불균형발전전략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덩샤오핑이 1980년 7월에 체제개혁을 논의했을 때 “불균

31) 농가청부경영의 기본적인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족 수에 따라서 혹은 가족 수와 노동력에 따라서(사람 수와 노동력에 대해 서로 다른 분배계수가 주어진다) 토지를 농가에 청부를 주어 경작하게 한 후, 농가는 청부계약에 따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통일수매 혹은 할당수매요구에 응하고, 아울러 생산대에 일정량의 유보를 납부하여 공동적립금과 공익금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생산물은 전부 농민의 소유로 한다. 린이푸 외,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176~177쪽.

32) 『전국농촌공작회의기요(全國農村工作會議紀要)』(北京: 人民出版社, 1982).

형발전을 인정하고 이용해야 한다. 이를 계속 견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져야 국가가 낙후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sup>33)</sup>라고 설명했다. 선부론이 제기한 불균형발전전략은 이후 추진될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 청사진을 보여주었고, 또한 국가발전전략과 관련한 중국 지도층의 중요한 네 가지 인식전환을 담고 있었다. ①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균형·등속(均衡勻速) 성장에서부터 파상적 성장(波浪式前進)으로 전환되었다. ② 지역 간의 발전수준은 균형적이지 않다(不平衡)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③ 계층 간의 소득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④ 균형적이지 않은 발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균형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sup>34)</sup> 이와 같이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은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연해지역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빠른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대외개방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개혁의 심화·발전에 따라 이 전략은 1988년에 연속되는 ‘두 개의 큰 국면(2個大局)’<sup>35)</sup> 사상으로 정리되었다.

33)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鄧小平年譜 1975~1997(上)』(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4), 657쪽.

34) 武力, “均衡與非均衡: 鄧小平關與經濟發展的辨證思想研究,” 52쪽 참조.

35) “연해지역에서는 대외적인 개방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2억 인구를 가진 이 큰 지역이 비교적 빨리 먼저 발전해서 내지(內地)를 발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정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지도 이 정세를 돌보아야 합니다.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한 다음에 연해지구에서는 더 많은 역량으로 내지 발전을 도와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인 국가상황입니다.” 덩샤오핑, 『등소평 문선(下)』, 김승일 옮김(서울: 범우사, 1994), 128쪽.

### 3. 혁명적 경제전략의 등장 배경과 정책적 특징

북한은 1993년 12월 초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후 3년간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면서 이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혁명적 경제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1994년 4월 6~8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 과업달성 문제”로 상정되어 채택되었다. 혁명적 경제전략이란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방침을 관철시키고 석탄, 전력, 철도운수, 그리고 금속 등 선행 부문을 계속 발전시켜나간다는 경제건설방침”이다.<sup>36)</sup> 그러나 앞에서 다루었듯이 북한이 3년으로 설정했던 완충기는 예상과 달리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1998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1990년대 초반 발생한 경제난 속에서, 실제로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원·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작동이 중단된 중공업부문 생산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경제구조에서 절반 이상<sup>37)</sup>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공업 생산의 중단이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농업, 경공업, 대외무역의 우선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혁명적 경제전략’을 제시하였던 것이다.<sup>38)</sup> 이는 198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

---

36) 김일성, 『1994년 신년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5쪽.

37)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도표 참조,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maryMenuId=EC206>  
(검색일: 2017.02.13)

38) 북한의 농업, 경공업, 대외무역에 대한 선차적인 투자의지는 『로동신문』, 1994년 1월 8일 기사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의 정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들의 정책노선 및 체제성격 변화에 직면한 북한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등을 내세우면서 북한식 사회주의발전경로에 따라 발전하겠다고 발표했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주의 진영의 개혁정책의 물결이 북한으로 밀려오는 것을 막고자 북한은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체제수호에 전력을 다했다. 경제차원에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고 1980년대부터 대외무역, 경공업, 농사, 수산업 등 분야에 여러 가지 추진방침들을 제시했다.

따라서 1993년 말에 제시된 혁명적 경제전략을 1990년대 초 발생한 경제난에 대응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1980년대의 농업, 경공업, 대외무역 부문의 정책 실행 경험과 같은 맥락에 놓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혁명적 경제전략 추진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행정부문보다 군부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혁명적 경제전략을 추진하는 담화에서 군대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했고,<sup>39)</sup> 이는 1998년 10월부터

---

이 기사에서는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이 부문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이며 나라의 자금과 과제, 설비들을 거기에 무조건 우선적으로 돌릴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39) 김정일은 담화에서 두 번이나 군대의 효율성 및 경제생활에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사업부문 일군들은 군수공업부문 일군들처럼 일을 실속 있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수공업이 제일 실속이 있습니다.”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96.04.22),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171쪽; “올해농사작황이 좋은것은 인민군대가 농사를 잘 도와 주었기때문입니다. 사실 올해농사는 인민군대가 동원되어 지은셈입니다.” “당면한 경제사업의 몇가지 문제”(1997.09.10), 『김정일선집』, 제14권, 360쪽.

‘선군노선’의 공식화로 이어진다. 아래에서는 혁명적 경제전략의 제기 배경과 형성 과정을 정리하고, 1980년대 정책들과의 연관성 및 특징을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 1) 혁명적 경제전략의 등장 배경

### (1) 사회주의 진영의 변화와 경제위기

1980년대에 들어 북한 지도부는 1970년 말부터 발생한 누적채무 문제와 ‘생산의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무역 확대 방침을 더욱 강화했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특히 구소련과의 무역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구소련과의 무역은 1984년에서 198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5억 2,100만 달러에서 45억 1,6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79%의 신장세를 보였다.<sup>40)</sup> 대외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1984년에 34%에서 1987년에는 50%로 웃돌게 된다.<sup>41)</sup> 또한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입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34%에서 1986년 67%까지 증가하였다.<sup>42)</sup> 북한에게 소련은 외화수입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의 정상화’에 필요한 원유나 코크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원자재 공급자였다.

1980년대 말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따라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그리고 소련의 갑작스러운 경화결제 요

---

40)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80쪽.

41) 위의 책, 66쪽.

42) 위의 책, 85쪽.

<표 2> 북한의 알곡생산(Food Cereal Production) 1989, 1993, 1995년

Crop	1989 알곡(Crop)		1993 알곡(Crop)		1995 알곡(Crop)	
	생산 (1,000ton)	산출 (kg/ha)	생산 (1,000ton)	산출 (kg/ha)	생산 (1,000ton)	산출 (kg/ha)
벼	3,900	6,000	3,440	5,300	2,580	3,969
옥수수	4,200	6,000	3,200	4,600	2,350	3,357
총산(Total)/ 평균(Avg.)	8,100	6,000	6,640	4,950	4,930	3,663

자료: Office of the Agricultural Commission and Mission Estimates,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22 December 1995.

구는 대소 무역의존도가 높았던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의 부족에 봉착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자신의 생산능력이 쇠퇴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역사상 최초로 1980년대 말부터 실행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를 자인하게 되었다. 계획경제의 위축 가운데서도 일반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식량난에 따른 배급제의 중단과 공장가동률 저하에 따른 생필품난이었다.<sup>43)</sup> 공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 농업체계에 서 필수적인 원료와 연료가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은 농업 생산이 실질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6차 당 대회에서 1,500만 톤 알곡고지 점령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표 2>에 드러나듯이 북한의 농업 생산은 이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무역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대외 무역액은 1990년 47.2억 달러, 1991년 27.2억 달러, 1992년 26.6억 달러, 1993년 26.4억 달러로 계속 줄어들었다.<sup>44)</sup> 또한 한국정부의 통

43)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99쪽.

계에 따르면 북한의 외채 부담은 1986년에는 23.4%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1988년을 제외하고)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해 1994년부터는 외채가 국민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점하게 되었다.<sup>45)</sup>

이 시기에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국방비 예산 감소 및 군대 감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체 국가예산 지출총액에서 1960-1990년대 중반까지 30%를 유지해오던 북한의 국방비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24%로 감소하였으며,<sup>46)</sup> 북한군 100,000명은 1991년 군대에서 감축되어 사회건설사업에 투입되었다.<sup>47)</sup>

## (2) 대외관계 개선의 시도

1980년대 말 소련·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냉전의 종식,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소련과 중국이 잇따라 한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시도했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기존 관계를 냉각시키고, 반대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일성은 1992년 4월 12일 워싱턴타임즈 기자와의 담화에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조·미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

44) 한국개발연구원, 『1995년도 북한경제 동향』(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4), 33쪽 <표 2> 참조.

45)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80쪽.

46) Chung-in Moon and Sangkeun Lee, “Military Spending and the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Perspective*, Vol.33, No.4(2009), p.81.

47) Hazel Smith,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190.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된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sup>48)</sup> 또한 북한은 한·중 수교 다음 날인 1992년 8월 25일 자 『로동신문』 논설을 통해 북·미 관계개선을 촉구하였다.<sup>49)</sup> 1988년 12월부터 1992년 12월 사이 북한과 미국은 28차례의 참서관급 외교관 접촉을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여의치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제기한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참서관급 회담의 고위급회담 격상, 교차승인의 추진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미 팀 스피리트 훈련의 시행에 따라 북한은 강경한 대응자세로 전환하며 1993년 3월 8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12일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국가의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어쩔 수 없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sup>50)</sup>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시도했다. 1989년 3월 31일 다케시타(竹下登) 일본총리는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정식국호를 사용하여 관계개선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도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과 일본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전개한 결과 1991년 1월 30일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1차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8차례 회담이 진행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은 당시 핵문제 해결과 북·일 관계개선 속도 문제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개선 우선순위에서 대일관계보다는 대미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일접

48) 『로동신문』, 1992년 4월 18일, 정규섭,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서울: 일신사, 1997), 229쪽 각주 35 재인용.

49) 리석윤,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 『로동신문』, 1992년 8월 25일; 정규섭,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 242쪽 각주 65 재인용.

50)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협상과 도전의 전략적 선택』(서울: 명인문화사, 2013), 142쪽.



근의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sup>51)</sup>

한국과의 관계도 1990년대 초의 완화된 분위기 속에서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을 통해 급진전시켰다.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8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 개 부속합의서 및 네 개 공동위 운영개시일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1993년 1월 26일 팀 스피리트 훈련 시행을 공식 발표하자 북한은 1월 29일 고위급회담 북한대표단 성명을 통하여 대화재개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경하게 표명하였다. 1993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고립된 외부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일본·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으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52)</sup>

## 2) 혁명적 경제전략의 형성과정

1990년대 초 북한의 위기는 내적·외적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sup>53)</sup> 북한 스스로는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 즉 “예상치 않았던 국제적 사변들과 나라에 조성된 침예한 정세로

51) 정규섭,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 252쪽.

52) 위의 책, 244쪽.

53) 자세한 분석은 이태섭, 『북한의 경제 위기와 체제 변화』(서울: 선인, 2009), 295쪽; 박후건, 『북한 경제의 재구성: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15), 137쪽 참조.

하여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난관과 장애에 부딪혔다”<sup>54)</sup>고 주장했다. 199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는 향후 2~3년을 완충기를 설정하고 “혁명적 경제전략”을 채택하였다. 혁명적 경제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생산수단생산부문보다 소비재생산에 더 큰 힘을 넣고” 국가투자 분배도 농업·경공업·대외무역 부문들에 선차적인 지위를 부여했다.<sup>55)</sup>

많은 선행연구는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이 북한이 1990년대 경제 위기에 대응한 수동적 적응정책이라고 주장한다.<sup>56)</sup> 그러나 농업·경공업·대외무역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은 이미 198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경공업, 수산업, 살림집과 경제관리방법 개선 등 다방면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4년 2월 16일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여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진행하였다. 연설에서는 대외무역, 경공업, 농사 부문 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업 증산, 수산업 발전, 인민 소비품생산 증가, 급양사업 개선, 주택건설 추가건설 등 5가지 과제 및 추진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는 경제정책은 1986년 12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이 발표한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제3차 7개년계획

---

54) 『로동신문』, 1994년 1월 1일.

55) 김상학,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과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경제연구』, 제91호(1996), 9쪽.

56) 박후진, 『북한 경제의 재구성: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136~165쪽,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57)</sup> 소비품 생산부족, 누적채무문제, 농산물 생산둔화 등 경제침체의 심화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정책의 초점은 경공업·대외무역·농사에 집중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1984년부터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도입하고, 대외무역 강화조치를 채택하며, 기존에 있던 농민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들을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부문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경공업제일주의’, ‘농사제일주의’, ‘수산제일주의’ 등 구호들이 지도자의 연설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sup>58)</sup>

1980년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노동신문 기사나 관료, 학자들의 담화·논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신빙성이 낮아서 북한 당국의 민생 향상 정책의 효과를 확인시켜 주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sup>59)</sup>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통계자료를 참조하면, 1982~1989년 기간 동안 북한의 국민소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에 따라 북한 경제는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외화난 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1990년대 초반에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는 1980년대 경

57) 이찬행, 『김정일』(서울: 백산서당, 2001), 552쪽.

58)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1986.01.0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379쪽.

59) Eberstadt Nick, *The North Korean Economy: Between Crisis and Catastrophe*(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2007), p.31, Table 2.6 Official DPRK Reports of Per Capita “National Income” for Various Years, 1946-1995.

제 침체에 대응하여 제시하였던 경제정책을 “혁명적 경제전략”이라  
는 이름하에 새롭게 체계화하여 발표하기에 이른다. 당시 북한 지도  
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농업과 경공업 생산회복과 구조조정  
부터 착수하려고 하였다. 조선로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관련  
기사는 혁명적 경제전략의 본질에 대해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  
기 위한 전략”<sup>60)</sup>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지도부는 국내외 환경의 급속  
한 변화에 “경제구조와 무역구조를 개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박  
한 문제”<sup>61)</sup>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생산회복과 구조전환의 시도는 순탄하지 않았다. 혁  
명적 경제전략은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전략”<sup>62)</sup>으로서 자금과 자원  
의 제약하에서는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의 ‘유혼교시’를 빌려서 전력, 석탄, 금속 공업과 철도  
운수 등 선행부문의 중요성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sup>63)</sup>  
“물질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할 처지에 농업에 투자를 더 집중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sup>64)</sup> 이런 의견 차이는 혁명적 경제전략 이  
후의 추진과정에서도 계속 나타났다. 일부 이론가는 당시의 경제 형  
편에서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를 원만히 보장하지 않고서는 “농업제일  
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할 수 없고 인민경제  
어느 부문에서도 생산을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없다”라고 강경  
하게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라는 태도를 표출했다.<sup>65)</sup>

60) 『로동신문』, 1995년 3월 2일.

61) 『로동신문』, 1994년 1월 8일.

62) 『로동신문』, 1994년 1월 20일.

63) 『로동신문』, 1994년 10월 5일.

64) 『로동신문』, 1994년 11월 2일.

65) 박두성, “사회적생산의 정상화와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발전,” 『경제연구』, 제

혁명적 경제전략의 제기는 1980년 6차 당대회 시기부터 김정일의 ‘후계자’ 공식화 과정과 중첩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수령의 영도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한 김정일은 혁명적 경제전략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로동신문』 1994년 1월 8일 기사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의 정당성”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와 우리 경제발전의 합법칙성 그리고 변화된 경제건설의 환경을 제때에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과거 실행했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노선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령활하게 구현하는 길을 뚜렷이 밝히시고 빛나게 이끌어 오시였다”<sup>66)</sup>라고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김정일이 혁명적 경제전략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과, 또한 혁명적 경제전략이 과거 북한이 추진했던 중공업우선경제건설노선을 변화된 현실 상황에 맞추어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 3) 혁명적 경제전략의 정책적 특징

북한은 1990년대의 위기 상황을 체제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진영의 몰락과 제국주의 국가의 봉쇄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경제난관으로 인식하였다.<sup>67)</sup> 이에 따라 북한 지도부는 ‘완전히 혁명적인 경제정책’을 내어놓지 못하였고, 1980년대 경제침체에 대

---

93호(1996), 3쪽.

66) 『로동신문』, 1994년 1월 8일.

67)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현시기 경제운영방향과 자립적 민족경제잠재력의 옳은 리용,” 『경제연구』, 제97호(1997), 3쪽.

응하기 위해 제시하였던 경제정책들을 형식적으로만 체계화하여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정도의 대응책만을 내어놓았다. 자연히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계획경제의 기본목표와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물질적 유인을 결합하려는 정도의 변화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변화는 제시되었으나, 근본적 개혁이나 경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혁명적 경제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적 경제전략 기간에 기존의 경제구조를 개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중공업 위주의 경제노선에 따라 발전한 결과로, 북한의 공업 부문의 비중은 급속히 상승하고 농업과 기타 부문의 비중은 급속히 하락했다.<sup>68)</sup> 또한 공업총생산에서 소비재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에 들어서 생산수단 생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sup>69)</sup>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 더 악화된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명적 경제전략을 제기했다. 하지만 선행부문의 우선발전과 농업·경공업에 대한 투자 증가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선행부문과 농업·경공업 부문 중 어디에 투입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정책의 모호성은 북한 내부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혁명적 경제전략은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권의 큰 변동은 북한 지도부가 “변혁의 조짐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

68)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110쪽 표 <3.4>와 표 <3.5> 참조.

69) 위의 책, 119쪽 표 <3.9> 참조.

위해 새로운 지도이념을 창출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지도이념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구별된 독특성과 우월성을 강조한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실천이데올로기로 등장한다.<sup>70)</sup>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중공업공장들의 굴뚝에서가 아니라 중요하게 그것을 경공업과 농업에 더 잘 복무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sup>71)</sup>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sup>72)</sup> 위해서 제기된 혁명적 경제전략의 성공적 이행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전략으로 다루어졌다. 북한 지도부는 혁명적 경제전략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북한 체제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sup>73)</sup>

셋째, 혁명적 경제전략의 시행에 따라 정무원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경제지도모델이 형성되는 동시에 지방 분권화 양상이 조성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혁명적 경제전략의 과업과 방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정무원을 비롯한 행정경제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 것”<sup>74)</sup>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업·경공업은 북

---

70) 필자는 1986년 7월 15일에 김정일이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식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 형성의 계기로 본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개과정은 강성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출현과 전개과정,” 『안보연구』, 제24호 (1994), 5~17쪽 참조.

71) 『로동신문』, 1994년 1월 8일.

72)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05.24),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07쪽.

73) 위의 책, 407~410쪽.

74) 『로동신문』, 1995년 3월 2일.

한 지방경제의 중심 고리이고 혁명적 경제전략을 추진하려면 “지역적 단위, 거점으로서의 군(郡)의 역할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북한은 수입 자원·에너지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에 비를 찾아서 “수출원천을 탐구동원”하는 방침을 제시했다.<sup>75)</sup> 군에 자율권을 부여함에 따라 북한 내부에는 지방분권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sup>76)</sup> 지방과 정무원간의 행정 마찰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연설에서 정무원이 “아래를 엮어매고 지방의 창발성을 억제”하는 현상을 비판하고<sup>77)</sup> 군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관련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넷째, 농업부문에는 물질적 인센티브의 확대로 개인소유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가 강화되었다. 협동농장의 자율권 확대,<sup>78)</sup> 농민시장의 활성화,<sup>79)</sup> 상업적 수매방법의 사용<sup>80)</sup> 등 1980년대 추진했던 정책들은 혁명적 경제전략 추진과정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토지(텃밭)에 대한 사적 경작은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시켰다.<sup>81)</sup> 또한, 생산조직 차원에서는 1996년 3월에 분조관리제의 강화조치가 채택되어 북한 전

75) 『로동신문』, 1994년 12월 9일.

76) 주형남,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양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83호(1994), 17~20쪽 참조.

77) 김정일,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1994.10.20), 『김정일선집』, 제13권, 451쪽.

78) 한수환, “협동농장들의 다각경리조직에서 타산하여야 할 요인,” 『경제연구』, 제71호(1991) 참조.

79)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 2002), 344쪽.

80) 신동식,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산물수매의 본질과 특징,” 『경제연구』, 제79호(1993) 참조.

81)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년 수정보충)”, 제24조 참조. 장명봉 편, 『북한법령집』(서울: 북한법연구회, 2006), 46쪽.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조치는 분조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과거의 실적을 감안해 생산계획을 현실적으로 바뀌게 하였다. 분조관리제 강화 조치는 농가소득 증가와 농민시장 유통 활성화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지금까지의 생산방식보다 ‘물질적 자극’을 높이는 방법일 뿐이었고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산성 촉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경제적 균형이 강조되었다. 혁명적 경제전략에 관련한 기사와 논문에는 ‘균형’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했다. 주로 부문 간, 축적과 소비 간, 지역 간 등 세 가지 균형이 다루어졌다.<sup>82)</sup> 원자재·에너지·자금 부족으로 인해 북한이 과거에 시행했던 증공업우선정책과 고(高)축적·강(強)축적전략으로부터 소비재생산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변화가 주목된다. 또한 지역 간 균형과 관련해서 북한 지도부는 두 가지 정책경향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라진·선봉지역을 선정하여 불균형발전전략을 펼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생산력 배치를 통해 ‘군(郡)’단위 간의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한 ‘균형’은 거시적 및 미시적 범위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었고, 과거의 경제전략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소비재생산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늘여”, “발전 속도를 생산수단생산부문보다 더 높이”는 단기적인 조정정책이었

---

82) 부문 간 균형에 관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 전략,” 『로동신문』, 1994년 9월 23일 참조; 축적과 소비 간에 관해서 김상학,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과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경제연구』, 제91호 (1996), 8~11쪽 참조; 지역 간의 균형에 관해서 강영원,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84호(1994), 44~46쪽 참조.

다.<sup>83)</sup> 즉 농업과 경공업 발전 속도를 중공업에 더 가깝게 따라 세우는 동시발전 방식이었다.<sup>84)</sup>

#### 4.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의 비교

##### 1)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의 유사점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은 중국과 북한 양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지도부가 마련한 대응책이었다. 양국은 소련식 사회주의의 경로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의해서 서로 다른 발전경로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북·중 양국은 1960~1980년 사회주의 진영,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추진하였던 세 차례 개혁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sup>85)</sup> 양국 지도층은 경제위기를 통해 사회주의체제에 내포되어 있는 결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인센티브 유인책, 개인 이익에 대한 인정 등 여러 수단을 도입하여 사회주의체제 운영 기능을 조정하는 개혁을 시도했다.<sup>86)</sup> 또한 사회주의 진영의 심각한 변동 속에서 경제위기는 북·중 양국의 지도자에게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

---

83) 리준혁, “혁명적경제전략의 관철과 사회주의경제적진지의 공고화,” 『경제연구』, 제82호(1994), 15쪽.

84) 이찬행, 『김정일』, 742쪽.

85) 동유럽·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세 차례 개혁의 경험은 任劍濤, “社會主義國家改革的宿命,” 『二十一世紀評論』, 第133期(2012年) 참조.

86) 여기서 개혁이라는 개념은 고전적 사회주의체제로부터의 이탈 또는 수정 (shifting from the classical socialism)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라 권력의 정당성과 향후 사회주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핵심 과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과제에 대응하여 제시된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위기대응책이자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비교의 대상이 된다. 특히 두 전략은 제기배경, 새로운 지도자의 집권 초기 노선변화 시도, 농업 부문에 대한 개혁조치 도입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은 제기된 시점이 다르지만 국민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른 시기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배경적 공통점을 가진다. 중국의 경우에는 문화대혁명 시기 ‘평균주의’ 경제제도는 국민경제의 침체를 가져와 사회적 위기를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현상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소비수준 억제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본축적을 성취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도움 없이 자력갱생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경제개발전략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초에 이미 경제둔화 현상을 보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무역확대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재료, 에너지와 자금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진영의 몰락에 따라 북한 경제가 의존했던 지지대는 사라졌다.

둘째,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은 제2세대 지도자 집권 초기에 제기되어 경제노선의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하다. 덩샤오핑은 국가나 당의 최고 지도자직을 맡아본 경험이 없었지만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부터 실제적인 권력자로 인정되었다. 권력 승계와 함께 덩샤오핑은 자신이 제기하는 선부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일이 1993년 4월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권력의 핵심인 당과 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권을 장악했다. 북한은 김정일 후계 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기 1년 전인 1992년 4월에 국가주석을 대신해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김정일은 김일성이 맡은 국가주석직을 승계하지 않고도 군 지휘권을 장악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바로 이때쯤 북한에서는 이른바 “혁명적 경제전략”이 제기되었다.

셋째,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은 공업부문보다 농업부문에 먼저 개혁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물질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개인경리의 부분적 허용을 시도했다는 측면에도 유사하다. 공업부문보다 농업부문에 개혁이 더 일찍 시작된 이유는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공업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방대한 관련 부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포섭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공업 부문의 정책변화는 권력집단 내부 갈등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sup>87)</sup> 중국의 선부론은 농업부터 시작하여 농가청부생산·농가청부경영 등 일련 조치들을 통해 농민의 생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농업생산량도 대폭 성장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북한 지도층은 3대 제일주의 중에서 농업전선이 “가장 중요한 전선”<sup>88)</sup>이라고 강조하며 분조관리제의 강화조치와 협동농장의 수입에 대한 처분권과 이용권 확대, 개인 부업 경리에 대한 허용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펼쳤다. 하지만 북한의 농업

---

87) 수잔 셔크는 소련, 동유럽과 중국의 경험을 통해 공업부문이 농업부문보다 부분적인 개혁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Susan Shirk,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ese Industrial Reform,” Victor Nee and David Stark edited,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p.328~362.

88) 리민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경제연구』, 제88호(1995), 6쪽.

<표 3>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의 비교

	문제	진단	정책 특징	
중국	경제 파탄	평균주의	사회주의체제의 대한 인식전환	평균주의에 대한 비판; 부유, 효율 강조 사회주의 재해석,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개혁조치	농업 및 비국가독점경제영역에 대한 유인책 도입
				인센티브, 경쟁원칙 도입 지역 간의 불균형발전
북한	경제 파탄; 정치적 고립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 제국주의의 봉쇄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고수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이름하에 부분적으로 조정	중공업 위주의 경제노선의 계속 시행과 동시에 농업, 경공업, 대외무역에 대한 강조 생활수준 향상(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통해 권력 정당성을 확보 시도
			조정조치	제한적인 지방 분권조치
				농업부문 자율권 확대 불균형발전(경제특구)과 균형발전 두 가지 정책 경향

정책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면에서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도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개인경리보다 공업화된 대규모 집단화 경리정책을 선호했다.<sup>89)</sup>

## 2)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의 차이점

<표 3>에서 보듯이 북·중 양국은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다르게

89) 김정일은 북한의 농업에 대해서 “소규모적인 개인경리에도 뒷걸음치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대화되고 공업화된 대규모적인 공산주의경리에도 전지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리준항,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완전실현을 위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명도” 『력사과학』, 제1호(1994), 25쪽.

내렸다. 중국은 좌경착오에 주목하였던 반면, 북한은 외부환경 변화를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서로 다른 진단에 따라, 처방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계획경제의 기본 목표와 원칙을 계속 고수해 나가면서 물질적 유인을 결합하려고 하였다. 중국은 평균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인정하며 효율성, 경쟁원칙, 개인이익 등 시장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북한보다 정책적으로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 제도적 지원책, 정책 집행 기간, 정책의 일관성, 외부환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첫째,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은 경제발전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부론은 경제발전 속도의 불균형, 지역발전의 불균형, 소득의 불균형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시장의 작용범위를 확대시켰다. 개인과 지역은 인센티브에 자극을 받아 계획영역의 생산량을 완성하고 나서 추가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을 통해서 생산물을 매매했다. 이처럼 생산증가와 시장의 활성화 간에 선순환이 형성된 것이다. 혁명적 경제전략은 공업과 농업·경공업 간의 균형, 지역 간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균형발전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독립채산제, ‘개인부업’, ‘새로운 무역체계’, 분조관리제 강화조치 등 일련의 인센티브 조치들이 도입되었지만 물자 및 재정에 대한 강한 통제<sup>90)</sup>로 인해 시장이 작용가능한 공간이 제한되고 인센티브조치 도입-생산증가-시장 확대의 작동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

---

90) 양문수, “북한과 중국의 계획화시스템의 비교,” 『경제학연구』, 제49집 1호(2001), 147~180쪽, 임을출, “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2016), 95~96쪽 참조.

둘째,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은 모두 농업부문에서 개혁조치를 시행했지만, 제도적 지원책의 존재여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과거 인민공사는 ‘평균주의’적 분배의 제도적 기초였지만 선부론 시행에 따라 인민공사가 폐지되고 과거의 행정적 지리 구획이 회복되었다. 농촌지역 기층생산조직단위의 자율권 확대에 따라 농가 생산청부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농민들이 잉여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혁명적 경제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농장 건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농업뿐 아니라 지방공업, 상업류통,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을 비롯한 군안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을 망라하여 기업관리운영사업과 행정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전인민적소유의 대규모 다각경리”<sup>91)</sup>형태를 모색하고 있었다. 생산조직 규모의 확대에 따라 하위 분조단위의 생산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지고, 인센티브 조치가 작용했을 때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혁명적 경제전략의 추진과 관련한 북한 지도부의 모순적 태도를 보여준다.

셋째, 두 전략은 경제체제의 지속성과 비교할 때는 장기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선부론은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에 비해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은 선부론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1978년부터 개혁·개방 개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에도 계속 추진하였다.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 선부론은 빈부격차 축소와 공부(共富)를 목표로 설정하는 정책기조에 자리를 내어주었다. 중국에서 선부론은 거의 30년 정도 유지되었던 것이다. 반면, 북한은 혁명적 경제전략을 1993년 최초로 제기한 시기부터 ‘고난

91) 김향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형태와 방법,” 『경제연구』, 제 87호(1995), 29쪽.

의 행군' 시기를 거쳐 1998년 중반까지 지속하였고, '선군노선'의 제기에 따라 경제노선으로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혁명적 경제전략이 1980년대 초중반 제시되었던 여러 종류의 제일주의를 체계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혁명적 경제전략은 약 15년 정도밖에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중국의 선부론보다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의 시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는 중국에서 선부론이 성공하고 북한에서 혁명적 경제전략이 실패한 이유로 언급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심각한 경제위기와 중첩됨으로써 북한에서 혁명적 경제전략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정일은 노동당 내부담화를 통해 정무원과 지방 행정관료들이 무책임하게 일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군부대의 효율성을 칭찬하며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군부대를 많이 파견했다.<sup>92)</sup> 이것은 이후 북한 당국이 '선군노선'을 내세우게 되는 하나의 포석이 된다.

넷째, 북한 지도부는 혁명적 경제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적지 않은 정책을 펼쳤지만 정책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sup>93)</sup> 예를 들면 북한 지도부가 대외무역 영역에서는 군에게 번 외화를 처분하는 권한을 주고 “중앙이나 도가 군에서 번 외화를 한 푼도 다치지 못하도록”<sup>94)</sup> 규정하였다. 하지만 일 년도 지나지 않은 채 지도층이 “일부 단위들에서는 자기 단위에서 버는 외화가운데 얼마를

92)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96.4.22);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1997.1.24); “당면한 경제사업의 몇가지 문제”(1997.9.10),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4권, 160~172쪽, 274~287쪽; 360~366쪽.

93) 자세한 내용은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362~364쪽 참조.

94)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1994.10.20),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3권, 447쪽.



때여 자체로 무엇을 사오겠다고 제기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대외경제거래는 대외경제위원회와 국가의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들만 하고 그 밖의 개별적 기관, 기업소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변경했다.<sup>95)</sup>

다섯째, 선부론에 비해 혁명적 경제전략의 외부환경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다. 중국은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에 따라 미국, 일본 등 비사회주의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국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외부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시하였지만 핵문제와 한·미 군사훈련 문제 때문에 미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에서도 소극적 자세를 취하였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무역통로의 부재에 더하여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도 여의치 않아서, 북한 대외무역은 위기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시도했지만, 과거 소련·동유럽과의 무역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인프라 구축의 부족 및 북한의 법과 제도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불신 때문에 합작, 합영, 경제특구 등 외자유치를 통해 얻는 투자자금도 예상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 5. 결론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은 중국과 북한 양국 제2대 지도자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한 대응책이었다. 이 논문은 두

---

95)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1995.02.01),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4권, 9쪽.

전략의 비교를 통하여 양자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정리하고, 혁명적 경제전략의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부론에 비해 혁명적 경제전략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데에서 제한적 역할밖에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에서 내재적 모순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혁명적 경제전략을 추진하면서 독립채산제 확대, 분조관리제 강화 조치 도입 및 개인경리 부분적 허용 등 인센티브 강화하는 개혁조치의 특징을 드러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조하고 연합기업소 및 종합농장의 확장을 통해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제도적인 지원책이 결여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경제 구조조정을 착수하여 민생 분야, 특히 농업·경공업 분야에 일정한 치중정책을 채택하였지만, 제도적 지원책을 보장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분조관리제 강화조치를 도입하고 나서 기층생산조직의 생산성을 장성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분조에 자율권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종합농장을 통해 중앙통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셋째, 정책집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중국은 농가청부생산책임제도를 허용하여 농업생산량을 크게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지도층들 사이에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개혁의지를 담은 문건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완충기에 선차적으로 발전해야 한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지 못했다.

넷째, 대외관계에서는 중국은 일본, 미국과 차례로 국교를 맺으면서 안정적인 외부환경을 확보했지만, 북한은 외부환경 개선에 나섰음에도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였고 남한이나 다른 서방국가

들과의 대화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합영·합작 및 대외무역 추진 등의 정책은 부진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상술한 문제로 인해 혁명적 경제전략은 위기타파 및 경제회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군대의 역할이 크게 부상했다. ‘인민군대’가 생산 추진, 특히 농업생산에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이 김정일의 담화에서 종종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김정일은 당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기존 당 운용방식에서 전환을 모색하였다.<sup>96)</sup> 이것은 바로 나중에 있게 될 ‘선군’의 예고였다.

물론 지리조건, 문화, 역사 등 면에서 중국과 북한의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비교를 통해 ‘중국은 왜 개혁개방의 길을 가게 되었고, 북한은 왜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선부론과 혁명적 경제전략의 비교연구는 두 경제전략의 유사성과 각자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중국과 다르게 ‘선군노선’ 전략을 취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4월 11일 / 채택: 8월 1일

---

96) 이종석, “김정일시대의 조선노동당: 위상·조직·기능,” 이종석·백학순 공저,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13쪽.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김일성, 『1994년 신년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_\_\_\_\_,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2) 논문

강영원,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84호(1994).

김상학,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과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경제연구』, 제91호(1996).

김향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형태와 방법,” 『경제연구』, 제87호(1995).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경제를 변함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제99호(1998).

\_\_\_\_\_,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현시기 경제운영방향과 자립적 민족경제잠재력의 옳은 리용,” 『경제연구』, 제97호(1997).

리민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경제연구』, 제88호(1995).

리준항,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완전실현을 위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력사과학』, 제149호(1994).

리준혁, “혁명적경제전략의 관철과 사회주의경제적진지의 공고화,” 『경제연구』, 제82호(1994).

박두성, “사회적생산의 정상화와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발전,” 『경제연구』, 제93

호(1996).

신동식,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산물수매의 본질과 특징,” 『경제연구』, 제79호 (1993).

주형남,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양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83호(1994).

최광근, “사회주의하에서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연계의 본질과 형태,” 『경제연구』, 제84호(1994).

한수환, “협동농장들의 다각경리조직에서 타산하여야 할 요인,” 『경제연구』, 제 71호(1991).

### 3) 신문

『로동신문』, 1992년 4월 18일.

\_\_\_\_\_, 1992년 8월 25일.

\_\_\_\_\_, 1994년 1월 8일.

\_\_\_\_\_, 1994년 1월 20일.

\_\_\_\_\_, 1994년 9월 23일.

\_\_\_\_\_, 1994년 10월 5일.

\_\_\_\_\_, 1994년 11월 2일.

\_\_\_\_\_, 1995년 3월 2일.

### 4) 기타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년 수정보충)』.

## 2. 남한 자료

### 1) 단행본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협상과 도전의 전략적 선택』(서울: 명인 문화사, 2013).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2).

덩샤오핑(鄧小平), 『鄧小平文選(上): 1975年~1980年12月』, 이문규 옮김(부천: 인

- 간사랑, 1989).
- \_\_\_\_\_, 『등소평 문선(下)』, 김승일 옮김(서울: 범우사, 1994).
- 린이푸 외,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한동훈·이준엽 옮김(서울: 백산서당, 2001).
-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박후건, 『북한 경제의 재구성: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15).
- 보겔, 에즈라(Ezra F. Vogel), 『덩샤오핑 평전』, 유소영·심규호 옮김(서울: 민음사, 2014).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_\_\_\_\_,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서울: 한울, 2010).
- 이종석·백학순,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 이찬행, 『김정일』(서울: 백산서당, 2001).
- 이태섭, 『북한의 경제 위기와 체제 변화』(서울: 선인, 2009).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장명봉 편, 『북한법령집』(서울: 북한법연구회, 2006).
- 정규섭,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서울: 일신사, 1997).
- 한국개발연구원, 『1995년도 북한경제 동향』(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 2) 논문

- 강성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출현과 전개과정,” 『안보연구』, 제24호 (1994).
- 고유환, “사회주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
- 박순성, “김정일 시대(1994~200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2004).
- 양문수, “북한과 중국의 계획화시스템의 비교,” 『경제학연구』, 제49집 1호 (2001).

임을출, “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2016).

### 3) 기타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6](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 C206)(검색일: 2017.2.13).

陳維力 옮김, “사회주의 精神文明 건설의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 『중소연구』, 제10권 4호(1986).

## 3. 영문 및 중문 자료

### 1) 단행본

Eberstadt, Nick, *The North Korean economy: between crisis and catastrophe*(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2007).

McCormick, Barrett L., *Political Reform in Post-Mao China*(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Oi, Jean C., *Rural China Takes Off: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Economic*(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Smith, Hazel,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第3卷(北京: 人民出版社, 1993).

牛欣芳, 『談先富』(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8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鄧小平年譜 1975~1997 (上)』(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4).

\_\_\_\_\_, 『鄧小平思想年譜: 1975~1997』(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 2) 논문

Moon, Chung-in and Sangkeun Lee, “Military Spending and the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Perspective*, Vol.33, No.4(2009).

Shirk, Susan,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ese Industrial Reform,” Victor Nee and

- David Stark edited,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Sutter, Robert G., "External Factors Affecting the Economy,"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edited, *China's Economic Dilemmas in the 1990s: the Problems of Reforms, Modernization, and Interdependence*(New York: M. E. Sharpe, 1992).
- Wu, "The Xiaogang Village Story," Alexander V. Pantsov, Steven I. Levine, *Deng Xiaoping: A Revolutionary Life*(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陳啓懋, "鄧小平主導調整外交政策, 爲我國現代化建設贏得重要戰略機遇期," 『領導者』, 第8期(2014年).
- 馬嶺, "對我國現行憲法中'階級鬥爭'問題的反思--兼與1954年憲法作比較," 張慶福·韓大元 主編, 『1954年憲法研究』(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5年).
- 秦暉, "中國改革前舊體制下經濟發展績效芻議," 『雲南大學學報: 社科版』, 第2期(2005年).
- 沈寶祥, "30年來國人思想觀念的三大轉變," 『人民論壇』, 第24期(2008年).
- 武力, "均衡與非均衡: 鄧小平關與經濟發展的辨證思想研究," 『黨的文獻』, 第6期(2012年).
- 張愛茹, "鄧小平'先富', '共富'思想的歷史考察," 『黨的文獻』, 第6期(2005年).



# The Comparison of China's 'Getting Rich First' Policy and North Korea's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Yu, Ruo-Ying(Dongguk University)

China's 'Getting rich first' policy and North Korea's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is the coping strategies raised by second-generation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when they faced with serious economic crisis from late 1970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ort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wo strategies, and to find out why North Korea's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could not deal with economic crisis and restore economic order effectively.

In the midst of the serious changes of the socialist camps, the two countries realized the flaws of the socialist system and tried to adjust the functions of the socialist system by introducing partial reform measures. Therefore, China's getting rich first policy and North Korea's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can be regarded as crisis countermeasure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wo strategies have commonalities

in terms of the background, the nature of short-term policy, attempts to change economic path at the beginning of new leadership, and the introduction of reform measur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owever, two countries made a different diagnosis of the economic crisis. While China paid attention to leftist mistakes, North Korea ascribe the economic crisis to external environment's change. Depending on the different diagnoses, the prescriptions also had to be different. Two countries' strategies are different in their percep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policy consistency, and external environment. The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has a limited role in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due to the inherent contradiction of perception of economic development, th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the problem of consistency of policy enforcement, and the lack of external environmental conditions.

Keywords: getting rich first policy,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coping strategy of economic crisis, socialist state's developing path, comparison